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문제

임 순 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상봉·교류 인원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지난 7년 동안 남과 북은 15차례의 대면상봉사업,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사업, 1차례의 서신교환사업, 그리고 6차례의 화상상봉사업을 하였다. 특히 15차례의 대면상봉사업을 통해 15,400여명의 가족·친척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6차례의 화상상봉사업을 통해서도 3,300여 명의 상봉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의 가족·친척이 서로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봉 방식 개선 및 다양화를 통해 보다 더 내실 있는 상봉을 기함으로써 가족 상봉의 의의를 한층 더 높였으며 금강산 면회소 건설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성과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최근 고령 이산가족의 사망률 급증은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

□ 이산가족문제 해결 추진방안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 등 사안별 의의 및 중요성·시급성 등을 재검토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산가족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 등 4단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당사자인 이산가족의 바람 내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측의 이산가족사업 관련 행정여건 개선 지원을 통한 상봉·교류의 활성화이다. 예를 들면 화상상봉센터 설립을 위한 필요 설비자재 지원, 이산가족실태조사 및 이산가족 DB화를 위한 관련 교육·장비 지원 등을 통해 상봉·교류를 활성화 한다. 셋째,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경험과 이산가족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상봉·교류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 추진한다. 예를 들면 이산가족의 유언·유품 및 유골을 사망자 가족들에게 전달, 재북가족이 없는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직계가족이 없는 고령 이산가족의 본인 의사에 따른 귀향, 또는 가족의 동의에 따른 고령 이산가족의 귀향 및 재결합, 고향방문, 상봉가족 동숙, 동반 성묘 등 상봉의 내실화 제고, 재북가족에 대한 송금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상봉·교류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제도화이다. 예를 들면 동반가족 수 확대를 통한 상봉인원 규모 확대, 면회소 설치·운영 이전 특정일을 계기로 한 상봉의 정례화, 면회소 설치·운영 이후 상시 상봉 및 기상상봉자의 재상봉, 화상상봉의 정례화(월1회), 화상 상봉장의 상설 운영을 통한 상시 상봉 등의 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한다. 여섯째,

생사·주소확인사업 및 서신교환사업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제도화이다. 생사·주소확인사업은 연중 2회로 정례화하며 북측의 실무능력 및 우리측의 지원능력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신교환사업은 통신협정 체결을 통해 우편물 교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서신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실상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래 상봉사업은 거의 정례화 되어 가고 있으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사업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그러나 금강산 면회소 건설을 통한 상봉의 정례화·제도화, 상시상봉 등을 상정할 때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사업의 규모 확대와 정례화·제도화는 필수 선행조건이다.

□ 전망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교류사업에 있어 비교적 호응해 온 편이라고 할 때,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은 이산가족문제 관련 의제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대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교류사업에 있어 보다 더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교류로 인한 체제동요를 우려하여 상봉인원 규모 확대에 소극적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생사·주소확인은 상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당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류형태일 수 있으므로 생사·주소확인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북핵문제 및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돌출 상황 변수들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들 가운데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교류이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이산가족 당사자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간 불신 해소 및 신뢰도 제고로부터 시작된다고 할때 남북의 최고 정책결정자가 만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인도주의사안인 이산가족문제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